

민·관 파트너십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방식 연구

김용국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I. 서론

현대 도시공원은 단순히 조성됨으로써 완료되는 공간이나 소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공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 많은 도시들이 도시공원의 운영·관리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민·관 파트너십은 민간부문의 자원이나 서비스를 공공부문으로 이전하거나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프로젝트로서 민영화에서부터 아웃소싱(outsourcing)에 이르는 광범위한 공동 프로젝트(joint project)라고 할 수 있다(National Audit Office, 2002). 즉, 공공부문에서 조성·관리의 책임이 있는 프로젝트에 경제적, 사회적인 차원에서 특정한 원인에 기인하여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요해지면서 발생된 관계이다. 유영철(2008)은 민·관 파트너십을 일정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업·비영리단체·시민이 자원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하는 일이라고 정의를 내려,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민·관 파트너십의 주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민·관 파트너십 도시공원은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는 과정에 다양한 차원의 (지방)정부, 민간기업, 시민단체, 지역사회 단체, 시민이 합의를 형성해, 상호 자금, 노동, 기술 등의 다양한 자원을 서로 제공하는 공원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부터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는 과정에 민간부문을 참여시키는 방식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도시공원의 조성·관리 과정에 대한 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도시공원의 전체 계획과정보다는 세부단계에서의 민간참여방안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시공원에서 민·관 파트너십의 개입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태동기에 있는 우리나라 민·관 파트너십 도시공원을 도시공원의 계획과정(민·관 파트너십 형성 → 공원조성 → 공원 운영·관리)속에서 분석해보고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 관련사례, 관련법규 검토를 통해 분석요소를 도출하고, 도출된 분석요소를 사례공원별로 적용하는 과정을 거친다. 적용과정에서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심층면접방법을 이용해

분석결과를 도출했다.

II. 민·관 파트너십 도시공원 국내사례 분석

1. 분석의 틀

분석은 민·관 파트너십의 개념이 적용되어 도시공원이 조성·관리된 국내사례를 선정하여 이루어진다. 사례 공원들은 크게 민·관 파트너십 형성 단계, 공원조성단계, 공원 운영·관리단계 세 단계로 나뉘어져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 속에서 파트너별 역할, 파트너십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내 민·관 파트너십 도시공원 조성·관리 방식의 유형과 특징, 그리고 각 유형별 계획과정상에서의 장점과 한계점을 알아볼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 과정을 통해 향후 민·관 파트너십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방식의 개선방향과 활성화를 위한 단서를 찾고자 한다.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이론과 선행연구, 해외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분석요소를 선정하였다.

사례 공원은 국내 도시공원 가운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도시공원의 계획과정에 있어서 파트너십을 통해 조성·관리한 사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업의 일환으로 SK주식회사와 울산산시의 파트너십을 통해 조성된 울산대공원, 마찬가지로 CSR 사업의 일환이지만 기업의 명예회장이 개인의 사재를

표 1. 국내사례 분석의 틀

		분석요소	
		대분류	세부요소
계 획 과 정	민·관 파트너십 형성	민·관 파트너십 형성 배경 및 목적(민간부문, 공공 부문)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도시공원 조성·관리 프로 세스	
	공원조성	부지확보 주체 및 역할, 부지확보방식	
		재정(finance) 주체 및 역할, 재원확보방식	
	공원 운영관리	운영·관리 주체 및 역할	
		모금활동 방식·과정·내용, 프로그래밍 지역사회 참여	

들여 대전광역시와 함께 조성한 유림공원, 조성에서 운영·관리 과정에서 이르기까지 민·관 파트너십 개념의 적용을 시도한 서울숲, 국내 최초로 지자체가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한 사례인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 복합개발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조성된 대구시 달서구 용산공원, 그리고 비영리단체인 서울그린트러스트가 주도해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조성된 우리동네숲 조성사업 가운데 명확한 후원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자본이 참여한 사례인 강동구 명일동 우리동네숲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2. 분석의 결과

1) 울산대공원

울산대공원은 재원관련 문제로 장기 미조성중이던 공원지역을 민간부문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조성한 사례이다. SK주식회사, 울산광역시, 전문가, 지역주민들은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부지확보·설계·시공 등의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했다(방창열, 2004)¹⁾. 일반적인 기업들의 사회공헌사업이 일회성 기부나 자선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과 달리 SK주식회사는 울산광역시라는 지역사회와 함께 10년이란 기간에 걸쳐 도시공원을 조성했다. 도시공원 조성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지역주민 의견조사,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쳤다. 울산광역시의 최고정책결정권자인 울산시장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과 SK주식회사 사이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마련되었고(SK주식회사와 울산광역시, 2007)²⁾, 양질의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민·관 부문의 공통적인 의식이 형성되었다(SK주식회사·울산시, 2007). 공원의 운영·관리는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에 SK주식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울산대공원은 공원조성비용 1,020억 원을 SK주식회사에서 전액 지원했다는 사실과 계획-설계-시공과정에서 SK주식회사가 참여해 공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³⁾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울산발전연구원, 2007). 반면, 울산광역시는 인·허가 절차 수행 등의 행정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SK주식회사와의 협의체 조직을 통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거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을 공원에 반영시킬 수 있었다.

2) 서울숲

서울숲은 시민들의 문화공간, 시민들의 사회문화적 네트워크 형성 차원에서 공원조성과 운영·관리 과정에 민·관 파트너십이 형성된 사례이다. 서울시가 주도가 되어 공원은 조성 및 운영·관리하는 과정에 비영리단체인 서울그린트러스트를 중심으로 시민, 기업, 전문가가 참여했다. 서울시가 공원의 시설물 및 재산을 관리하고, 프로그래밍·홍보·공원보호활동·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등의 운영·관리는 서울숲사랑모임(NPO)이 담당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시설관리는 서울시가, 프로그램 운영은 서울숲사랑모임이 담당하는 이원화 된 운영방식은 민·관 파트너십이 성공적으로 자리잡는 데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숲사랑모임이 공동의 협이나 의사소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형식적인 업무분담을 통해 공원운영의 주체만 구분되는 현 실태는 민·관 파트너십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서울숲은 서울시의 위탁관리방식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 2009년 이전에는 서울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공원의 운영관리 업무를 맡아오던 서울숲사랑모임은 2009년부터 공개경쟁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위탁받게 되어, 운영의 안정성과 입지가 변하게 되었다(서울그린트러스트, 2009). 공개경쟁방식은 기업이 후원하는 비영리단체가 수시로 바뀌게 될 수 있으므로, 기업이나 시민들의 지속적인 후원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민·관 파트너십의 파트너 관계가 아직까지 공공부문이 위, 민간은 아래에 있다는 수직적 상하관계 의식이 존재하는 것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서울숲의 프로그램 예산조달 및 운영비는 서울시와 서울그린트러스트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시의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서울숲 사랑모임'의 기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3) 유림공원

대전광역시 유림공원은 시의 재정문제로 미조성 상태였던 도시공원 조성비용을 민간부문에서 후원한 사례이다(대전광역시, 2009). 민간부문인 계룡건설은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설계-시공)과정에서 대전광역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 기업과 지자체 사이가 아닌 계룡건설 명예회장 개인과 울산광역시 사이에서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부지확보과정에서 공원부지가 모두 공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와 유성구청 사이에서의 부지소유문제⁴⁾로 공원조성사업이 지연되었다. 이와 같은 공공부문 간의 마찰은 기업이 순수한 의도로 지역사회에 사회적 공헌사업을 펼치는 것에 제약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원조성 후 1년간 계룡건설에서 운영·관리한 후 대전광역시로 역할이 인계되었다.

4)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은 민간부문에서 사업성을 기반으로 하여 도시공원을 강남구청과 함께 조성·관리한 사례이다(강남구청, 2005). 강남구청은 지자체 주도 최초의 BTL(Build-Transfer-Lease)사업방식을 채택해 공원을 조성했는데, 이후 강남구청 관계자와 특수목적법인의 시공사였던 서희건설 주식회사 관계자와의 인터뷰 결과 현재와 같이 사회 전반적인 경제

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민·관 부문 모두 BTL방식을 통한 공원 등의 인프라시설 조성사업 참여에 회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은 도시공원의 조성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지만, 공공시설의 조성·관리과정에 민간투자를 유치했다는 측면에서 국내 장기미조성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의미가 있다. 공원의 운영·관리는 특수목적법인인 (주)대치리버파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실시협약에서 정해진 정부지급금을 강남구가 운영회사에 지급하고 있다.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은 조성과정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 기본계획 용역실시에 따른 공원시설 및 배치안의 적정성을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하는데 머물렀다⁵⁾. 공원조성과정과 운영·관리과정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공원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5) 강동구 명일동 우리동네숲

강동구 명일동 우리동네숲은 민간의 비영리단체인 서울그린트러스트가 추진주체가 되어 기업의 후원,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 사례이다(서울그린트러스트, 2008). 지자체, 자치구, 전문가, 대학, 조정업체 등과의 다부문간의 파트너십(Multi-Sectoral Partnership)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고 운영·관리했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동네숲 사업은 우리나라 민·관 파트너십 도시공원 사례 가운데 조성·관리방식 측면에서 볼 때 민·관 파트너십의 개념을 가장 잘 담아내는 공원이라고 볼 수 있다.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금원, 서울그린트러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메커니즘(mechanism) 구축, 파트너십을 통한 다양한 재원조달,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관리 측면에서 성공적인 민·관 파트너십 도시공원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도심지 내 생활권공원녹지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가 작고, 공원의 계획단계에서와 달리 실질적인 운영관리를 강동구청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공원의 운영·관리 문화가 정착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6) 대구광역시 용산공원

대구광역시 용산공원은 지자체 재정문제로 도시공원 조성비용을 확보하지 못했던 부지에 사업성을 기반으로 한 삼성테크 주식회사가 참여해 도시공원, 판매시설, 환승주차장 시설 등을 복합개발한 사례이다(임영록, 2007).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이익을 모두 만족시킨다는 긍정적인 점이 있지만, 개발사업 협약서의 내용을 민간부문이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고⁶⁾, 특정기업에 대한 지나친 특혜⁷⁾를 부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용산공원은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요구되는 도심부에 복합개발 방식에 의한 중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해 민간자본으로 도시

공원을 조성한 사례로 대도시 내 생활권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조성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단체들과의 협의절차가 생략되어 있어 계획의 투명성과 공원시설 및 프로그램의 질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III. 국내 민·관 파트너십 도시공원 계획과정에서의 시사점

앞서의 국내 사례들을 통해 국내 도시공원 계획과정에 있어 민·관 파트너십 도입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민간기금과 도시공원의 조성·관리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민·관 파트너십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된 유형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사업(CSR)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례와 민간투자 형태로 추진된 사례로 구분된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참여한 경우는 또 다시 기업주도로 도시공원의 조성비용을 후원하는 경우와 비영리단체(NPO) 주도로 기업의 후원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있다. 기업주도로 도시공원사업에 참여한 유형은 공원조성(계획 및 설계-시공)을 위한 재원조달과정에 한정된 반면, 비영리단체 주도의 다부문 파트너십을 통해 참여한 사례들은 공원조성 및 운영·관리단계에까지 민간부문이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사회적공헌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⁸⁾,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연결고리(connector)이자 조정자(coordinator)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국내 민·관 파트너십 도시공원 사례를 검토한 결과 계획 및 설계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의견청취 정도에 머물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또한 2000년대 들어 몇몇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공원 관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운동(movement)차원에 머물고 있을 뿐 이를 위한 제도적, 법적 토대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못한 실정이다. 공원은 시민참여가 바탕이 될 때 가치가 배가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도시개발사업, 도시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 추진 시 그 주체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제도적·사회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는 복합개발방식으로 조성된 경우가 있고, 2005년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이를 도시공원에 적용시키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들은 민간투자를 쉽게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공원의 질이 아닌 양적인 확충에 중심이 맞추어져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역주민의 여가욕구를 반영하고, 계획과정에서의 지역주민참여통로가 마련될 수 있는 제

도적 기반이 전제되어야 하겠다(이재준, 2007).

셋째, 지자체별 민·관 파트너십 도시공원 조성·관리를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내 외부에서의 자원조달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해 공원녹지를 조성하거나 개선하기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이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민·관 파트너십 프로젝트 제안을 받고 평가하는 업무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민·관 파트너십 전담 부서는 다양한 집단과 다양한 규모의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지역주민들이 공원조성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방법, 은행거래를 하는 방법,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겠다.

넷째,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자본이라는 공원의 특성상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직접적인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도시공원녹지에 대한 후원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민간부문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CABE, 2006).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의 이름과 브랜드명을 민간 기업에 판매하는 시설명명권 제도, 지자체의 출연금과 기업 혹은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통해 운영하는 도시공원기금 제도,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사업자 주도의 사유지 공원화를 유도하는 민간추진공원 제도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변정수, 2009).

다섯째, 지자체별 비영리단체가 육성되어야 한다. 서울숲이나 우리동네숲 조성사업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시민과 기업, 전문가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파트너십을 이루며, 도시공원의 운영·관리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도시공원 조성·관리과정에 참여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서울그린트러스트와 같은 비영리단체가 민간부문의 역할을 설정하고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자체별 대학,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도시공원 관련 비영리단체를 구성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장시켜 나가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공원 내 도입시설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겠다. 국내 도시공원 관련법규 상 시설기준 내용의 경직성은 민간부문의 도시공원 조성·관리 사업에의 참여는 물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민간부문의 이익이 절충할 수 있는 선에서 시설기준 완화가 필요하겠다. 도시공원을 무조건 공공의 구시대적 영역에 머물게 하기 보다는 새로운 여가 및 소비 트렌드, 도시개발방식 등과 접목시켜 도시공원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

IV. 결론

도시공원은 발전하고 진화하는 공간이다. 도시공원의 가치 변화는 사회적 인식의 변환, 즉, 공공주도의 조성·관리가 일반

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민·관 파트너십 도시공원으로의 변환을 전제로 한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 사회·생태 교육의 장, 공원 프로그램 및 환경의 질 관리 등 도시공원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긴밀히 협력할 때 가능하다.

지금까지 민·관 파트너십 도시공원 사례가 지자체 중심의 단일, 또는 소수 파트너가 주도해 조성·관리했다면 앞으로는 도시공원의 유형별로 효율적인 다부문간의 파트너십(Multi-Sectoral Partnership)을 형성해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도시공원은 공공공간이고 눈에 보이는 수익이 아닌 공익이 우선시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민·관 부문의 목소리를 반영시켜야 한다.

민·관 파트너십 도시공원 관리가 효과적이고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사회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참여는 도시공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그린트러스트와 같은 비영리단체가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크고 작은 도시공원을 조성, 관리하면서 성공사례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겠고, 도시공원 조성·관리의 틀을 결정하는 정책결정권자들의 도시공원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법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도시공원이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 주 1. SK에너지는 설계, 시공, 감리자 선정 등 사업 전반의 관리를 담당했고, 부지 매입, 부지 내 지장물 처리, 각종 인허가 절차 수행, 완공 후 공원의 운영관리 등은 울산시가 담당했다.
- 주 2. 울산대공원 조성사업 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했고, SK에너지, 기본계획 수립회사인 OIKOS사, 울산광역시 관계자로 구성되었다.
- 주 3. 울산대공원 조성과정에서 시공을 담당할 SK주식회사 CLX프로젝트 팀은 일반 플랜트 건설을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공원 조성에 관한 사내경험 인력 및 기술 자료가 전무한 상태였다. 따라서 울산대공원 조성사업의 각 부문, 즉 설계, 시공, 운영, 자문 등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인력을 선정하여 전문 분야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 주 4. 유성구청이 평생학습원 예정지라는 이유로 대체용지 확보와 건축비 지원을 대전시에 요구하면서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이 회장이 공사지연을 문제와 대전시와 유성구청의 '핑퐁게임'을 참지 못하고 기부 철회 의사를 밝히자 협상이 진전되기 시작했다(동아일보 2008년 10월 15일).
- 주 5. 기본계획 용역실시에 따른 테마체육공원의 조성시설의 종류 및 배치안의 적정성에 대해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직능단체회원 등 강남구 26개동 전체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936명이 참여해 95.4%인 893명이 조성계획안에 대해 높은 만족을 나타내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여줬다. 936명의 강남구민이 전체를 대표하는지의 문제점이 있다.
- 주 6. 협약서 내용에는 환승주차장 333면을 확보, '지하철 환승주차장과 상가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관리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상가부설주차장으로만 이용하고 있다.
- 주 7. 삼성테스코 주식회사는 홀플러스 시설을 포함한 시유지를 계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에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주 8. 기업의 사회적 공헌 규모에 맞게 도시공원을 매칭시킬 수 있도록 미 조성 중인 공원이나 유휴부지의 규모, 위치, 소요비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하겠다. 더불어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한 사회

공헌활동이 기업이미지 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에게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인용문헌

1. 강남구청(2005)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조성 기본계획.
2. 대전광역시(2009) 유림공원 사업현황보고.
3. 박창열(2004) 기업의 사회공헌에 관한 연구: 울산대공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 변정수(2009)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개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2009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5. 서울그린트러스트(2008) 2008 우리동네숲 리포트.
6. 서울그린트러스트(2009) 2008 서울숲사랑모임 애뉴얼 리포트 & 4년 사업보고서 자연과 함께 숨쉬는 서울숲.
7. 울산발전연구원(2007) 울산광역시 도시공원의 가치평가: 울산대공원을 중심으로.
8. 유영철(2008)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7(2).
9. 이재준(2007) 민간활성화를 위한 공원시설 제도 개선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개원 15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자료집.
10. 임영록(2007) 민간자본활용을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9(1).
11. CABA(2006) Paying for Parks: Eight Models for Funding Urban Green Space.
12. SK에너지. 울산광역시(2007) 행복한 울산대공원 만들기, 그 10년의 이야기.